

I. 기관운영

1. 기관의 목적 및 사업

○ 기관의 목적	(정관 제2조)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	(정관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구환경 분석 및 연간 기관운영 목표

1) 내·외부 환경 분석

□ 인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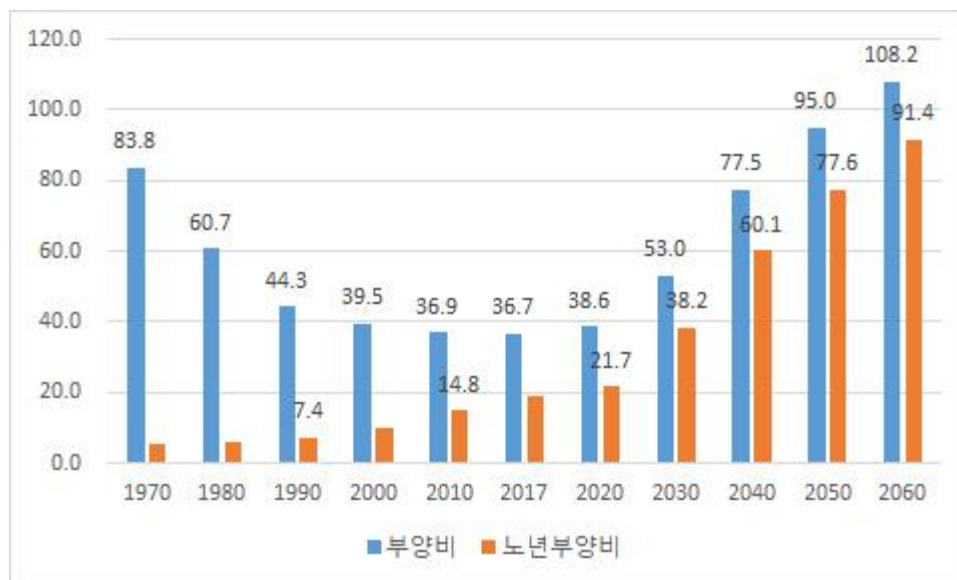
- 인구구조 변화 중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고령화는 노인인구 증가, 인구역전 현상, 노인의 고령화(8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의 증가)로 나타남.
- 이 결과 소비위축,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만성 질환자 증가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발전 가능성이 저해되고,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저하를 초래

○ 부양비¹⁾ 증가

- 부양비는 1970년 높은 수준이었다가 2012년 최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하는 V자형을 나타내며, 2017년을 기점으로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를 추월함.
- 노년부양비 증가는 노인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가능인구(15~64세)의 사회적 부담 증가에 따른 가구의 생활수준이 저하돼 실질적인 가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수요를 증가시킴.
 -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14.8%(고령 사회), 2020년 21.7%(초고령 사회) 진입 후, 2050년 77.5%까지 증가 전망

[그림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양비 변화 추이



주: 2012~2044년 인구 5천만명 유지 기간임.

자료: 통계청(2019). 「장애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추계 결과

○ 가족구조의 변화

-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최빈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가,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1인가구가 최빈가구(2018년 52.7%, 중위 50% 가처분소득 기준)로 등장함.
- 1인가구의 빈곤율(중위 50% 가처분소득 기준)은 2016년 54.0%에서 2018년 52.7%로 다소 감소하였음(이현주 외, p. 62). 1인 가구는 혼인을 하지 않는 청년 인구와 고령 1인 가구가 혼합되어 있음. 특히 1인 가구 중 1분위 60% 이상이 고령자임.

1) 부양비(Dependency ratio)는 다음의 정의에 따른 총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로 구성됨.

※ 총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 유소년부양비 = 유소년인구(0~14세)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가능인구(15~64세) × 100

- 인구문제는 향후 빈곤·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50년 고령화율 39.8%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시장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고, 여기에 국가 및 사회의 역할이 미약하면 가처분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
 -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노인(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확대와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2046년에는 노인빈곤율이 현재 대비 40%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될 것으로 전망(고제이, 2016)
- 합계출산율 1.0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 진입
 -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러한 출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극히 낮은 저출산 현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구 변동의 위협을 점차 고조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경제성장 저하(New normal) 및 가계부채 증가, COVID-19 이후 심화

- 우리나라 중장기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는 모든 기관들 공히 감소 추세를 전망
 - 코로나 19 이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국제기구와 국내 기관 모두 감소 추세를 전망함. OECD(2012)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2011~2030년 2.7%, 2030~2060년간 1.0%수준으로 전망함. KDI(2010)는 2011~2020년간 4.1%, 2021~2030년간 2.1%, 2031~2040년간 1.7%로 전망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OECD 사무총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며, 그 영향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크고, 이로부터 회복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함(2020.3.24.).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했으며, 세계경제 성장률도 -3.0%로 하향 조정함. IMF는 “세계 경제가 지난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함(2020.4.14.)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이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음(김미곤, 2005).
 - 따라서 기존의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으로는 경제성장이 될지라도 빈곤 및 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OECD(2016)는 “지니계수가 1포인트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12%포인트 감소”

□ 노동시장 변화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높은 자영업자 비율, 비전형근로의 증가 등의 특징이 있음(통계청, 2019).
-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921만명이고, 이 중 실업자는 3.0% 수준임. 이 중 임금 근로자는 2055만명이고, 정규직은 63.6%, 비정규직은 36.4%임.
- 비전형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용역근로(3.3%), 특수형태근로(4.5%)는 증가한 반면, 파견근로(△3.8%), 일일근로(△6.6%), 가정내근로(△13.9%)는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0.4%p 증가한 것임.

〈표 1〉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

(단위: %)

근로형태별	2017. 08.			2018. 08.			2019. 08.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69.0	74.2	71.2	69.8	75.5	71.6	69.5	75.7	70.9
정규직	85.0	88.4	85.9	86.2	90.1	87.0	87.5	91.5	87.2
비정규직	36.5	45.3	44.1	36.6	45.9	43.6	37.9	48.0	44.9
한시적	52.2	64.7	61.3	50.6	62.9	57.9	49.0	61.7	57.1
기간제	52.9	67.2	62.3	51.3	65.3	58.8	49.0	63.1	57.6
비기간제	49.6	55.3	57.9	48.0	54.2	54.6	49.1	56.3	55.0
시간제	17.1	21.7	23.0	18.6	25.0	24.8	19.8	26.7	26.1
비전형	20.2	33.3	30.0	19.8	32.1	29.9	19.1	32.3	29.0

주: 비전형근로는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일일근로, 가정내근로를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www.kosis.kr, 2020.4.26. 다운로드)

○ 일자리 수급 전망

- 인구구조라는 측면만 고려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일자리 부족, 2030년 이후 인력 부족
- 4차 산업혁명과 통일이 일자리 수급에 미치는 영향 → 일자리 부족
 -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앞선다는 특이점 도달(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2045년에 『특이점(singularity)이 온다』) → 일자리 부족

○ 노동이 본(本)이라면 복지는 말(末)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분절화

등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불평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연도별 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분석 필요. 2020년 중반까지의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시사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 1, 2차 산업혁명은 삶의 질 제고, 노동권 착취, 제국주의 등장, 1,2차 세계대전, 소득 격차로 인한 공산주의 등장, 복지제도 발전 등의 명암을 제공
 - 오늘날의 복지제도(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작동 원리 간의 모순을 보완하는 기제)는 제2차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부분적으로 치유하는데 기여하였으나, 그 한계가 부각되고 있음(예: Occupy the Wall Street, 트럼프 현상, Brexit, 헬조선)
- 3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글로벌 아웃소싱, 금융자본주의 심화, 경제위기 및 불확실성 증가,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과 중장년 층 고용불안 야기 등의 부작용 노정
 -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심화되면 모순을 완화하는 기제(복지 등)가 강화되어야 하나, 신자유주의와 제3차 산업혁명이후 복지의 역할은 오히려 감소
 - 이는 완전고용, one bread earner 등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에 기인
- 2015년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초지능, 초연결 사회로의 연결이 확대되어 시간적·공간적 유연성이 확대되어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복지체계에 대한 고민(예: 기본소득 등) 필요
-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숙련위주로 분배되는 경향이 강하고, 규제개혁과 제도변화는 경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향상되겠지만 저숙련자 취업기회 감소, 영세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OECD, 2013).

□ 빈곤 불평등 변화

- 1965년 40.9% 수준이던 절대빈곤율(서상목, 1981)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감소하였으나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절대빈곤율이 다시 급증
- 빈곤 및 불평등은 거시적/미시적 요인, 악화/완화 요인, 사전 발생원인/사후적 완화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의 중첩으로 나타남.
 - 신자유주의, 기술의 발전,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 인구고령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없는 경제체계, 낮은 복지수준 등의 거시적인 요인과 건강의 악화, 낮은 교육수준, 빈곤문화 등의 미시적인 다양한 요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이윤주도형 성장 패러다임,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분절, 그리고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은 빈곤 및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공적이전과 빈곤·불평등 변화

- 노동시장에서의 1차 소득분배가 미흡할 지라도 2차 재분배(복지정책)가 잘 될 경우 가처분소득기준 빈곤 및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대비 절반 이하이고, 이 결과 조세 및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율 개선효과는 약 14.1%(2012년)로 나타나 OECD 주요 국가들의 빈곤율 개선효과 약 59.9%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표 2〉 OECD 국가의 빈곤율 개선 효과(중위 50%기준)

(단위:%)

구분	한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시장소득 빈곤율(A)	19.7	24.9	36.9	29.0	32.8	25.2	25.3	33.0	26.8
가처분소득 빈곤율(B)	17.4	9.3	8.1	11.9	10.4	12.1	12.4	15.7	17.8
빈곤개선율 ((A-B)/A*100)	11.7	62.7	78.0	59.0	68.3	52.0	51.0	52.4	33.6

주: 일본은 2015년, 호주는 2018년,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는 2017년 기준임.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 이러한 빈곤 및 불평등 개선정도는 향후 공적이전지출이 증가하면 그 개선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론되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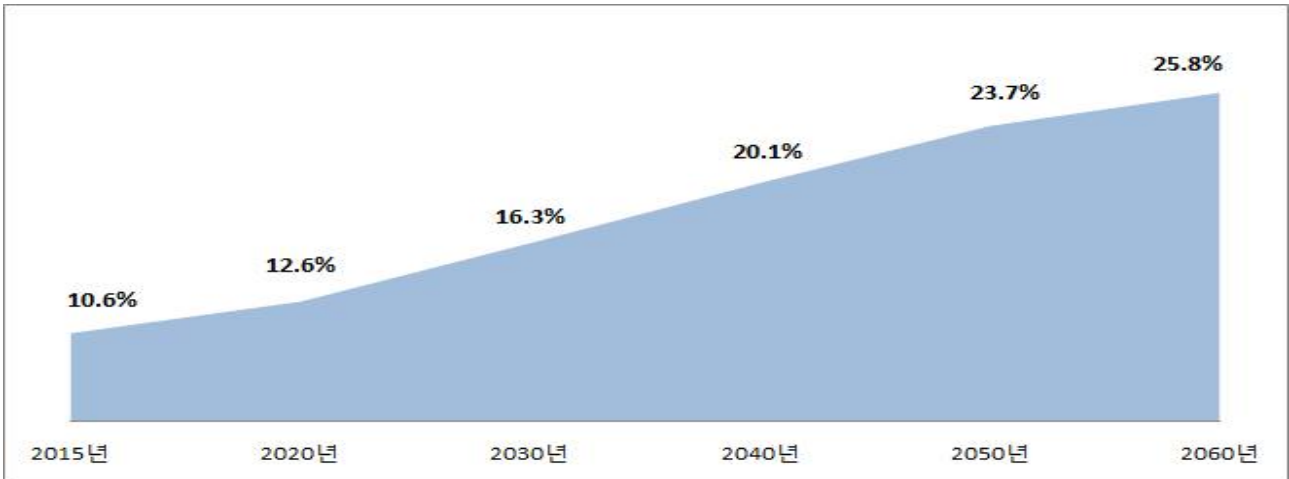
- 신화연(2013)에 의하면,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4.6%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80.2%(기초노령연금 포함 시 89.9%), 사회보험을 제외한 일반재정지출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3.5%에서 2060년 5.7%로 증가
- 향후 복지예산(2060년 GDP 대비 25.8%²⁾) 증가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공적연금³⁾과 보건이나, 공적연금의 빈곤 감소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⁴⁾
 - 연금제도 성숙이 빈곤 및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하지만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위에서 아래로(top-down 방식)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저소득층들이 받는 급여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임.

2)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3) 2015년 예산안에 의하면 공적연금 비중은 보건·복지·고용 예산 중 가장 큰 34%임.

4) 강성호의 연구(2011)에 의하면,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상대빈곤율(중위 50%기준) 완화는 50대 3.6%p, 40대 9.0%p, 30대 3.9%p로 나타났음. 백화종·강성호의 연구(2011)에 의하면,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한 빈곤율 축소는 2008년 1.8%p, 2018년 3.3%p, 2028년 2.8%p로 나타나고 있음. 국민연금제도 적용 전후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08년 0.397%, '18년 0.398%, '28년 1.389%, '38년 1.773%의 개선효과(개선율기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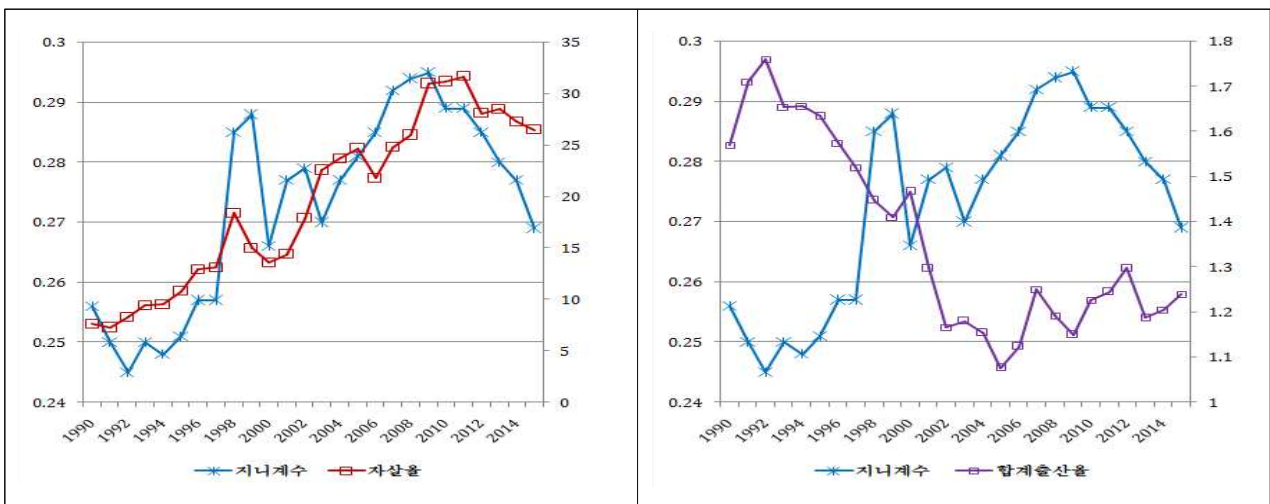
[그림 2] 사회보장지출 전망(GDP 대비)



자료: 신화연(2016.12.27.)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는 사회이동성이 낮아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자살 등 건강·사회문제를 증가시킴(Wilkinson and Pickett, 2009).
-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도(지니계수)와 자살률 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지니계수와 출산율 간에는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발견

[그림 3] 지니계수와 자살률 및 출산율 추이



자료: 여유진(2017)

2) 연구 환경 분석

- 양적·질적 측면에서 정책연구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 연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타당성·효율성·실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계·연구계·산업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동연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회환경 변화로 다양한 복지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국민들의 욕구를 측정하고 정책화를 위한 근거 자료를 생산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민자 등 코로나 19 이후 한국인의 트라우마와 사회적 불안 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증대
 - 빈곤 및 불평등의 변화, 정책 영향으로 간주되는 통합의 수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기초자료의 생산과 확산이 주요 정책기반으로 활용될 것
- 정책 개발 및 평가를 위하여 정책기관 등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분석 및 제공하는 체제 구축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초 통계 수집 필요
- 체감형 고객만족서비스 수요 증가
 -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수요 확대와 더불어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요구 증대
 - 다양한 복지 논쟁과 서비스의 확대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눈높이를 제고시키는 한편, 신뢰성과 예측력 높은 정책에 대한 기대 상승
 - 이에 따라 정책수요자인 정부 입장에서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정책 설계와 미래 대응을 위한 선제적 보건복지 비전 창출이, 정책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투명한 복지 제도 시행이 만족도를 제고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
 - 보건복지 정책 당국과의 유기적 협력·협조 관계 구축 필요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정책 당국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기여도 및 기관 위상 제고
 - 보건복지 부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정부 및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과 보건복지 지식 공유가 요구
 -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 분야의 교육 및 공공재인 정보전달·공유의 허브 기관으로서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공개와 확산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 요구

- 다양한 영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제 간 연구의 필요성 증가
 - 기존의 연구영역별 경계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제가 나타나는 데, 분야별로 독립적인 정책 대응을 수행할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앙 부처 간 경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성격의 정책대응이 필요함.
 - 다차원적인 복합 문제를 포괄하면서 각 사례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가 절실함. 경제, 고용, 국토, 문화, 사회보장, 교육, 국방 등 사회 제 분야와 협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경우 보건과 복지, 노동 등 다양한 세부 연구 영역의 연구자들이 동일 공간에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협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정책 일선에서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의 중요성 강조
 - 정책 일선에서의 정책 집행 양상과 일선 현장의 담당자들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정책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
 - 정책기획 수준에서 누락할 위험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여 현실 정합성이 높은 정책의 안착에 기여할 것임.
- 해외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과 정책 함의의 모색이 일정 기간 이전에 진행된 이유로 최근 해외 경험이 주는 교훈을 새롭게 구할 필요
 - 서구 복지국가와 아시아 일부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정책의 환경에서 일정한 경향의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재편 수행
 - 고용불안정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령화 등 유사 문제를 경험하는 해외 복지 개혁의 최근 동향을 점검할 필요
 - 최근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경향
 - 아시아의 경우 모델분석과 시사점 발견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향후 정교한 모델개발에 협업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으로 기대
- 국제적 연구 네트워킹 체계 구축 필요
 - 전 세계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와 외국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 수행 필요
- 세종시 이전 완료에 따른 새로운 연구환경에서의 역량 극대화 필요
 - 부처, 타 국책연구기관과의 인적·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외 네트워크 외연을 확장하고, 특히 과학기술계와 복지-기술 융합 적극 시도
 - 패널조사 등 각종 사회조사의 수행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조사 수행의 어려움 극복

3) 기관운영 목표

□ (비전)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제시

- (경영목표) ① 포용복지국가의 정책비전 제시, ② 사람중심·실사구시의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③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 정책분석과 미래대응, ④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⑤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의 기관운영 목표 설정

▶ 경영비전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제시

▶ 기관 설립목적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의 장·단기 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 5대 경영목표 및 15개 추진전략(5-15)

I.	포용복지국가의 정책비전 제시	I-1. 사회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포용복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I-2. 사회정책 부문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평가 연구
II.	사람중심· 실사구시의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II-1.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II-2. “사람중심” 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패러다임 연구
		II-3.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III.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 정책분석과 미래대응	III-1.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대응 전략 마련
		III-2.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제도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방안 논의 활성화
		III-3. 국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 모델 개발 및 확산
IV.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IV-1.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IV-2.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IV-3. 쉽표가 있는 일터 혁신
V.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	V-1. 연구성과의 개방과 확산기제 강화
		V-2. 정책수요 의견수렴 활성화
		V-3.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V-4.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 5대 경영목표 및 2021년 추진전략

5대 경영목표		2021년 추진전략
I	포용복지 연구 및 국정철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복지포럼 운영 성과 보고 · 국정철학 확산 평가 · 포용복지 및 미래 사회정책 비전 제시
	사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평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국내외 선도적 정책 사례 연구 수행 · 평가기법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교류 · 중앙-지방 정책성과 공유체계 마련 · 원내·외 정보통계시스템 활용 최적화를 위한 연계
II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행복과 삶의 만족 조사 · 한국인의 행복 조사 data 및 DB 대외 공개 · 행복 증진을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 제시 · 사회배제·불안 지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람중심” 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패러다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보건의료 미래상 제안 ·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제시 · 미래건강위협요인 대응방안 정책화 · 생애주기별 맞춤형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 정책화 · 사회보장계획의 지역화 수립 지원 · 커뮤니티케어 사업 평가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육구진단 조사 및 주요 결과 공개 · 원내 수행과제의 조사 설계 협의체 운영 정착 ·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III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대응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보건복지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 · 사회보장대응체계 고도화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보건복지대응체계 구축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제도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사회격차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개발 · 남북한 사회제도 통합방안 도출 · 북한 보건복지 Fact Book 발간 · 남북 교류·협력의 효율성 제고방안 도출 · 북한에 적용 가능한 사회발전 모델 도출 및 확산
	국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 모델 개발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사회개발모델 학술대회 개최 · 동반자국 사회발전 모델 도출 · 국제기구와 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 · 국제사회보장리뷰 격월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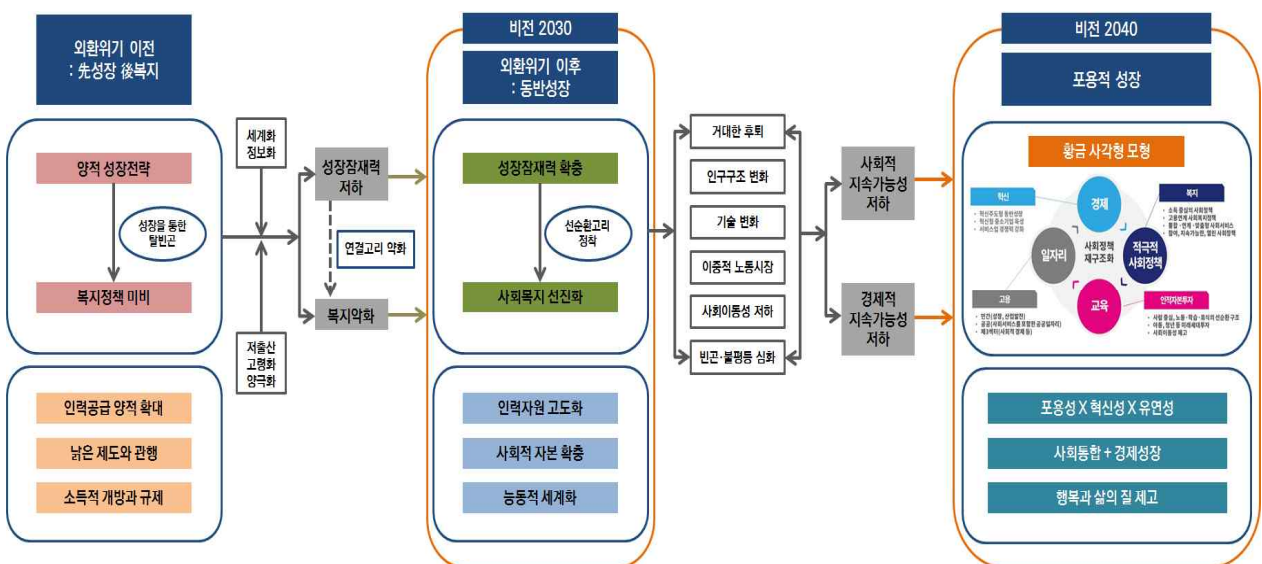
5대 경영목표		2021년 추진전략
IV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형 경력개발제도 정착 · 권익옹호위원회 정착 · 자율·책임형 성과관리제도 정착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상향식 융합연구 추진 기반 마련 · 상시적, 정기적인 협동·융복합 연구 수행체계 여건 마련 · 조직 내·외부 전문가 인력 정보 연계 체계 마련 · 전문가 인력풀 활용성 강화체계 구축 · 조직 내 보유지식 분석 및 활성화 전략 마련 · 능동적 지식공유 및 확산 전략 마련
	쉽표가 있는 일터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제도 정착 · 맞춤형 연구휴직제도 정착 ·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착
V	연구 성과의 개방과 확산기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보고서 홈페이지 등록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 연구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한 성과 확산 강화 · 영문화 성과물에 대한 확산 체계 강화 · 국제기구 대응을 위한 지속적 협력·자문 시스템 구축 · 연구원 고유통계지표 생산체계 구축
	정책수요 의견수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모제를 통한 연구과제 정착 · 부처 협력체계를 통한 연구과제 개발 확대 · 정책현안대응체계 강화
	예산 편성·집행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편성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피드백 강화 · 업무매뉴얼 및 교육자료 개선 · 구성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예·결산정보제공 확대 · 고객 맞춤형 정보 확충 · 핵심 지출 정보 공개 범위 개선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주년 비전 선포식(21.7.1.) · KIHASA e-역사관 개관 · 50주년 화보집 및 사사 발간

3.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포용복지 구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장기적으로는 노동 기반 사회보험제도의 벗어난 탄력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응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 초저출산의 지속과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은퇴, 빈곤·불평등·양극화·사회갈등의 심화, 보건 및 복지재정 증가 등 다양한 위험요인 존재
 - 2000년~2020년의 저부양비 기간 동안 국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담보
 - 분배상태의 악화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거나, 복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정적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실증 연구가 있음. 복지지출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소비' 개념에서 '투자' 개념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포용복지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함.
 - 포용복지의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지향으로, 국민 모두가 기본생활 이상의 생활을 향유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희망을, 중장년·노인에게는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복지제도를 재설계함을 의미함.
- 국정 철학을 '성장' 중심에서 '국민 행복'으로 전환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단과 목적의 전치 현상을 극복할 필요
 - (황금사각형 모델 구축) 교육-경제-노동-복지 정책을 분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일자리-교육-복지 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긴급

[그림 4]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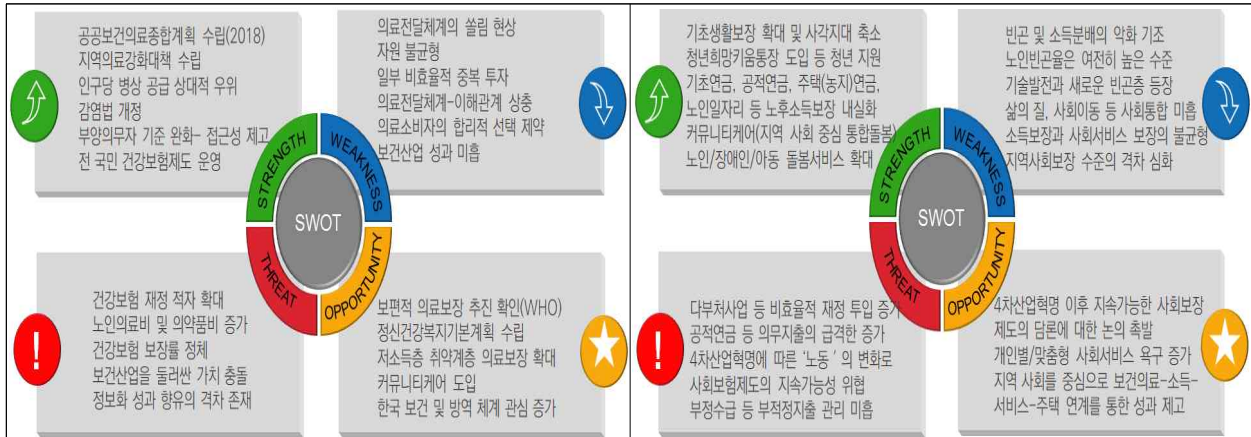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비전마련 연구

□ 포용복지국가 추진을 위한 연구 방향 설정

○ 보건 및 복지 분야 SWOT 분석

- 보건·복지 분야 미충족 욕구 및 사각지대 등 열악한 분야에 우선 투자
- 후방 연관효과(일자리 창출 등)가 큰 분야에 우선 투자
-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기초 통계 및 근거 기반 연구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가능성에 대비한 연구



○ 연구 방향 설정

- 사회적 위험의 생애주기 간 분산(risk-pooling)과 계층 간 분산(redistribution)
- 부문별·영역별 통합적 전략 수립으로 제도 간 통합과 연계를 통한 효율화
- 건강보장성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효율화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소득-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전략 필요

- “고령화”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 개발이 필요함
 - “건강한 고령사회 구축”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구축하고, 자택에서 노인들이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식사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함.
 - 전 생애주기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건강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체계적·포괄적·예방적 사회안전망 확충

- 사회적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포용 정책 전략 마련
 - 빈곤층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의 효과 및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함.
 -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서비스 종사자 등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 배제집단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욕구 측정
- 인구 특성별(근로계층, 노인, 아동 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생계보장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에게는 생계보장, 의료,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소외된 아동에게 자립할 여건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을 책임지는 가족의 지원 방안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전환 및 확대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등 전달체계 운영 방식 개선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및 재원조달체계 심층분석과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복지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 구성의 변화에 따라 복지재원의 조달 방식도 변화
- 지방화 시대의 진전으로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간 복지격차와 불균형은 심화
-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성 및 복지 체감도 증진 필요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과잉 급여 축소

□ 저출산·고령화 대응 패러다임 변화와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

- 그간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제 저출산에 적응하면서 인구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인구변동 모니터링, 사망률 분석 등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 확대 필요
-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위한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통일을 대비한 연구 긴요함.

Ⅱ. 사업추진 방향

1. 2021년도 사업목표

- ☐ 총괄 목표: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 건강보장성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효율화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사회적 위험의 생애주기 간 분산(risk-pooling)과 계층 간 분산(redistribution)
 -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사회보장정책 개선방안 도출
 - 부문별·영역별 통합적 전략 수립으로 제도 간 통합과 연계를 통한 효율화

2. 연구사업 운영방향

1) 보건의료체계의 효과성 제고 및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 지원

- ☐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및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시행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비용의 증가가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한 효과 검토 필요
 - 의료기관 종별 기능·역할 정립과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의료제공체계와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 지원 체계 구축
 - 의료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 있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대두
-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 개발 연구 추진
 - 국가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에게 미칠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향 평가 실시
 - 불평등의 심화 및 코로나 19 등으로 개인의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 및 효과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 의료의 질(quality)과 불평등(disparity) 등 보건 분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
- ☐ 미래 질병 및 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주요 이슈 발굴
 - 메르스, 코로나19 등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질병 또는 알려져 있으나 발생률 및 지역적 분포가 증가하는 질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중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접근가능한 과학적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함.

2)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보장정책 설계

- ☐ 4차 산업 혁명 및 디지털화로 인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 모색
 - 미래 변화가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를 도출
 - 노동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의 조건과 과제를 검토
 - 인구 감소로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자를 우리 사회에 포용하기 위한 전략 기반 마련
 - 저임금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
 - 공공서비스 운영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위해 가장 근접한 지역 사회인 읍면동 동네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고,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테크노스트레스를 측정함.
- ☐ 한국형 사회보장의 설계와 개선 논의
 - 우리사회의 사회적 불안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향후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에 기초자료를 제공
 -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전망과 대응을 다학제간 연구로 수행하여 종합적인 한국형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
 - 상기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가책임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기여
- ☐ 부처별·대상자별로 사회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진단하고 복합·다중욕구에 대응하며 공공성과 지역성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대응 방안을 마련함.
 - 사회서비스의 개인예산 제도 도입 검토
 - 시설 보호에서 재가 보호로 전환(커뮤니티케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식사서비스와 주거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3)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 정치학·경제학·사회학·사회복지학·지리학·심리학 등 범(汎)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한국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한국형 모델 구축,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장·단기적인 제도적 실행방안 제시
- ☐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의 상황 진단을 목적으로 한 정책 실험의 결과 예측 및 정책 성과 진단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사회조사를 수행
- ☐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외국의 주요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특징을 확인

4)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논의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관련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국가인구전략 마련
 - 청년층의 삶의 환경변화 진단과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 모색
 -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부양 부담의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
-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의 모색
 -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이슈 발굴, 집행, 평가 시도
 - 정보화의 역작용인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제를 사회복지 영역에서 선제적으로 마련
-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5) 통일 대비 보건복지제도 연구

- ☐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 마련
 -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도입 할 다양한 복지제도는 북한주민의 생활과 소득, 고용과 근로, 통일의 기대감, 남북한의 내적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남북한 대상별 사회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수행

6)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 기반 마련

-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 구조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위험을 진단하고 지출 구조조정 방안 모색
 - 유럽 복지국가의 조세·재정의 상호조응관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한국 사회보장이 마주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을 간접적으로 가늠함.
 - 미래 사회보장 재정 위기 대응 및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위험 요인을 모니터링 하고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지속가능성 분석
 - 사회보장재정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고 예산과 성과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도출
- 개인의 실직 및 질환, 사회적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부적정 지출을 관리하는 방안 모색